

충청권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共 同 發 表 文

충청권 3개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백지화 되거나 철회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가 주요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병리현상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인 과제이므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신행정수도 건설 본래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당초계획대로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충청권의 흔들리는 지역민심과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균형있게 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단편적으로 거론되는 행정특별시, 행정타운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각종 대안들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1. 충청권 지방4단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설득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1. 충청권 지방4단체는 그동안 결집해 온 공조체제를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염원하는 500만 충청권 시·도민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4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대전광역시회의의장
황 진 산

대전구청장협의회장

충청북도지사
이 원 중

충북도회의장
권 영 관

충북시장군수협의회부회장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충남도회의의장
박 동 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 ◆ 박동윤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11월 1일(월) 오전 11:30, 대전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되는 「충청권 3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각종 대안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500만 충청권 시·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 요청, 정당 및 국회 항의방문 등 4개 사항을 합의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합의 사항

- 중앙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각종 대안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500만 충청권 시·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① 대통령 면담 요청

-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라 들끓고 있는 지역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의 지속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 요구

② 정당 및 국회 향의 방문

- 각 정당 및 국회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③ 관련부처 방문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촉구

-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등을 방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촉구

④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한 공동 투쟁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관철되도록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투쟁을 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기초의회, 광역·기초단체장이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충청권광역의회 합동의원총회 개최



□ 충청남도의회 운영상황

- ◆ 충청남도의회(의장 박동윤)는 10월27일 오후 15시, 충청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대전·충북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광역의회합동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주민 안정대책과 신속한 후속대책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추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범국민 운동으로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한편 당리당락에 눈이 먼 정치권을 질타하며
 - 정부는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 정치권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석으로 변하는 당리당락을 버리고 이를 강력히 실행할 것이며
 - 근본을 무시한 채 충청권 달래기식 대안을 절대적으로 배척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범국민 운동으로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3개항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 이날 충남도의회 송민구 의원(공주 1, 자민련)은 의견발표를 통해 큰 기대를 걸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현재의 위헌 결정으로 크나 큰 충격과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이제 와서 성난 충청권 민심을 달래 보려고 기업도시, 과학도시 건설 등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짓은 우리를 더욱 성나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하여 성난 마음을 한데 모아 이제야 말로 본패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단합된 힘만이 살길이니 언제 어디서라도 모여 투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 ◆ 대전광역시의회 안중기 의원(서구 2, 자민련)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의견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고, 500만 충청인들이 단합하고 뜻과 힘을 모아 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충청권에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 ◆ 충북도의회 김정복 의원(청주 4, 한나라)은 위헌 결정 후 충청도민은 깊은 허탈감에 빠졌었지만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우롱만 당했다는 성난 민심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권은 과오를 반성하고 신행정수도 건설만이 수도권과 지방의 유일한 상생의 길이라며 하루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 이 밖에 충북도 이기동 의원(음성 1, 한나라)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우리만 모르고 있었으며 대처도 미약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 대전시 심현영 의원(대덕 1, 자민련)은 다 같이 힘을 모아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하여 수도권 비대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충북도 정상혁 의원(보은, 한나라)은 지역 및 중앙에 있는 관련 기관·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자고 제의했다.
- ◆ 충남도의회 유환준 의원(연기 1, 한나라)은 현정부 마음대로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정하여 결과적으로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해 놓아 지금은 민심마저 흥흥하여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며 신행정수도건설을 이행치 않을 경우 현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의했다.
- ◆ 충남도의회 유영호 의원(청양 2, 자민련)은 열린우리당 해체 및 한나라당 각성을 촉구했다.
- ◆ 충북도 이필용 의원(음성 1, 한나라)은 좌절만 하지 말고 의원 모두 힘을 합쳐 상경집회 주장 및 「주민피해진상조사단」설치 제의했다.
- ◆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예산 2, 자민련)은 한마음 한 뜻이면 어떠한 일도 해쳐나갈 수 있다며 「비상대책기구」설치 제의했다.
- ◆ 충북도 강수성 의원(옥천 1, 우리당)은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되묻고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지금보다 몇 배로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 ◆ 충남도의회 강동복 의원(천안 2, 자민련)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관제데모를 주도했는데, 우리 지역 단체장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 ◆ 끝으로 박동윤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청권 의장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500만 시도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신행정수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끝까지 한목소리를 내자고 역설했다.

「新行政首都建設特別法」違憲 決定에 對應한

忠清圈 3個市·道 議員 共同決意文

우리가 염원하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회균등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원대한 목표가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현재가 공동으로 충청권을 한편으로 이용하고 한편으로 저버림에 따라 위기에 처하고 있다.

정치권은 어찌 국민을 볼모로 부끄러움도 잊은채 당리당락에 이를 이용해 왔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모르는 관습 운운하며 괴상한 논리로 백성을 우롱하는가

이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가 역사의 심판대에서 그 이름이 후손에게 영원히 숨기고 싶은 사실로 기록되지 않도록 이성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충청권 지방의원 모두는 앞장서 전국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정부결정을 믿고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의 삶과 존재가치의 의미가 정부의 배신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신행정수도건설을 계속 추진하라.
1.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한 여·야당 정치권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석으로 변하는 당리당락을 버리고 이를 강력히 실행하라.
1.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충청권의회 의원은 근본을 무시한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충청권 달래기 식으로 내놓는 정치권의 이상한 대안들에 대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배척하며 국민의 기회균등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양심있는 단체와 전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4. 10. 27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충남 송민구 의원〉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법의위헌결정에대하여 충청도민은 정치권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충청권 3개시·도 의원님 여러분!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우리 충청인의 뜻과는 관련도 없이 선거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발표하였고, 총선을 눈앞에 둔 정치권은 충청도민의 표를 의식해 지난 2004. 12월19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정권을 거머쥔 노무현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예정지로 충청권 지역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에 정말 순박한 우리 500만 시·도민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큰 기대를 걸고 소수의 반대 의견을 설득해 가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현재의 위헌 결정으로 우리 충청권 시·도민은 크나큰 충격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수도 중단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와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은 충청권 주민들에 대한 책임은 우선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특히 야당은 총선에 눈이 멀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뒤에서는 반대 여론을 조장하여 급기야 위헌에 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저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성난 충청권 민심을 달래보려고 여론에 기업도시, 과학도시 등 건설을 운운하며, 흘려 놓고는 뒤로 빠져 충청권의 민심을 살피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치권의 표리부동한 행동에 대하여 이대로 묵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충청인의 이름으로 심판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애매 모호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건설을 진실로 원했다면 제대로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지 묻

고 싶습니다.

위헌 결정이후 지금까지 미지근한 대처로 시간만 끌고 있고, 이렇다 할 보완책이나 뚜렷한 대책 한가지 내놓지 않고 팔짱만 낀 채 충청민의 눈치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야당 정치권과 뭐 하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로 충청도민의 성난 마음을 한데 모아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 끝까지 투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구하게 거론할 것도 없이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문제는 국가 경쟁력 제고나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기필코 풀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자 불멸의 명제입니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 자체는 그런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을 받았다면 보완책도 하루빨리 나와야 함은 극히 당연한 일이며 정부는 2,160만평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잇가로 매입해서 즉시 개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충청권 민심의 소재를 알았다면 특별법의 위헌과는 무관하게 신행정수도건설이 우리 충청권에서 국책사업으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단합된 힘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모여서 투쟁을 하고 또한 집행부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행정수도건설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3개 시·도민이 하나가 되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 될 수 있도록 500만 시·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노력으로 충청인의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의원님 여러분! 꿈은 이루어 집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충북 김정복 의원〉

충청북도의회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정 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0만 시·도민을 대표하는 대전·충북·충남도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충청권 광역의회 합동의원총회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의견 발표에 앞서 도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정치·경제 및 각종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의 시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3개시·도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온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여·야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어 법적 지지기반을 마련한후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치고, 수차례의 공청회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의 최종입지로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각종 계획과 시설이전 문제, 부지구입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들어서 수도권 일부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7월 12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수도이전은 국가의 공간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과업이며,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절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률의 제정, 공포에 앞서 국민적 합의(국민투표)에 의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상의 범규범으로 국민투표등의 헌법개정 절차이행이 필요하다는 헌법 제130조 헌법 개정절차 규정 위반과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불이행은 재량권 일탈이라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규정 위반에 의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법률적 모든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왔던 충청권 3시·도민은 상실감과 깊은 허탈감에 빠졌었지만 지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우롱만 당했다는 성난 민심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은 그동안 2년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물거품

이 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어 이로 인한 타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가격 폭락, 관련 건설업체의 도산우려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예상되고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로 교통망 등의 계획들이 이미 수립 완료된 상태임에도 이번 현재의 결정으로 충청권 3시,도의 야심찬 발전계획은 물론, 중앙정부나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국가적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 사태의 혼란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동안의 법제정, 공청회, 입지선정 등 국가의 막중한 대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해 온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선의의 피해를 입은 현지민들의 책임은 누가 질 것 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적 중대사를 형식적인 토론절차와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댓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3개시,도 전체 의원이 모인 것은 도민이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회나 정부의 신행정수도의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이 충청권에서 폭발하고 분노하는 민심달래기를 위한 당리당락의 정치계산에 따른 졸속의 대안이기 보다는 진정으로 500만 충청시,도민을 위해 진지하고 실현성있는 있는 국가차원의 충청권 개발계획을 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따라 현재의 위헌 판결이후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하여 3개 시,도의회 공동명의로

국회에 대해 대응적 차원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후속조치 등 특단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따른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대한 조속하고도 명확한 추진방안을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이에대한 후속대책으로 10월 25일 충청인의 민심을 전하고자 대통령님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던 정치권은 당리 당락 차원에서 졸속으로 입법 추진하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의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적 대사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충청권 시·도민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충청권내의 지역간 갈등의 소지 해소는 물론 충청지역 공동 발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3시,도 광역의회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안중기 의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정책의 지속추진

I. 국가균형발전 정책

①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세계는 지금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도시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ダイナミック한 성장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개발연대 시기에 강력한 집권-집중체제를 바탕으로 '투입 위주의 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농업경제를 산업경제로 전환시키는 '제1차 도약'을 이루어냈음. 그러나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

잘 아시다시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7.6%가 집중해 있으며, 67%의 금융대출이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제1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② 국가균형발전의 주요내용

지난 2004년 1월 16일 전문 48조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의 발전계획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둘째, 국가균형발전시책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육성,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지방문화 및 관광의 육성, 공공 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추진,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등과 관련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투자분담 등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함.

넷째,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음.

이와같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적으로 개성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 대해 논하겠음.

③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구도를 살펴보면,

첫째, 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라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의 전인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둘째,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라는 추진과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셋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중추기능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넷째, 위의 추진과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물적 인프라 및 해당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인프라 계획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그리고 이와같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대전광역시는 대덕 R&D특구 조성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R&D 핵심거점구축과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주력하여 세계과학기술의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임. 충청남도는 동북아경제의 대 중국 교역 교두로 건설한다는 것으로, 기흥-천안-청주 지역을 연계하는 IT밸리, 천안, 아산-서산-당진을 연계한 자동차 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통해 신 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임.

충청북도는 바이오토피아를 조성한다는 것으로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BT와 IT의 결합으로 바이오산업의 중핵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임

④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지방의 발전없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과 갈등이 커지고, 국가경쟁력도 약화됨.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와 예산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프랑스는 예산의 통합지원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하였음.

우리도 지금까지의 총량적 성장에서 균형적 성장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물리적 인프라확충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로, 그리고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추진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추진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Ⅱ. 지방분권 정책

① 지방분권의 의미와 실태

지방분권이란 지역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당 지방정부에 나누어주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실태는 소위 “3할자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권한에 집중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불완전한 자치제도와 자치역량, 주민 참여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중앙권한 집중의 경우 국가사무가 73%, 지방사무가 24% 정도 등이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정도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이고,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한 자치단체도 전체자치단체의 61%인 151개에 이르고 있음.

② 현 정부의 분권화 방향과 3대원칙

현 정부는 2004년 1월 16일 전문 제21조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선분권 후보완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사무를 우선 배분하되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 이양한다는 것임.

③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7대 방향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

둘째, 지방세정제도 개선 등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셋째, 지방자치권 강화 등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넷째,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다섯째,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여섯째, 다양한 주민참정제도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일곱째,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등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임.

특히 지방의정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 확대등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신분제도 개선,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강화, 지방의원 연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④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이러한 지방분권화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관계의 정립 외에도 지방정부 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협조관계의 구축, 단체장과 행정관료의 일체감 형성, 지방행정기구 및 기능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함. 아울러 주민여론이 정책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참여 및 여론수렴 장치의 확충이 필요함.

Ⅲ. 맺 음 말

지금까지 국가균형 발전정책과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임.

신행정수도의 건설 없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화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함.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있음.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봄.

특히 학계에서 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습법의 적용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봄.

정부에서 행정특별시를 검토하고 있다지만 이것은 수도이전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대전-신행정수도-오송-충주-평창 간 5조원이 투자되는 충청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전-신행정수도-오송-청주공항 간 9천 2백여 억원이 투자되는 경전철 건설사업, 청주-청원 간 환상형 광역도로 건설사업, 보령-공주-신행정수도-청주구간 철도건설사업 등 약 10조원에 이르는 충청권의 주요 대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00만 충청인들의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임.

오늘 이 자리에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의견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고 봄.

수도권에서 관계대모를 벌이는 동안, 충청권에서는 국민적인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지 않았음. 그것

이 냉철하고 합리적인 방안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임.

그러나 이제는 500만 충청인 들이 단합하고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하여 방관자적인 입장을취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임.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있도록 충청권에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 함.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신행정수건설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함.